광주·전남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 지역 대표성 강화해야"

전원위, 4일간 토론 마무리…소선거구제·의원정수 등 놓고 논쟁
"비례대표제, 전국 권역별로 나눠 연동형·준연동형 방식 적용" 의견도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가 13일 나흘간의 토론을 마무리했다. 여야 의원들은 그동안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의원정수, 비례대표제 등을 놓고 백가쟁명식 의견을 쏟아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전원위 토론에서 선거제도 개편이 궁극적으로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지역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구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중대선거구제, 대선거구제 도입 및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연동형 및 준연동형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우선 지역구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조오섭(북구갑) 의원은 광주 등 특별·광역시에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전남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경우, 광주는 두개의 선거구에서 각기 4명의 국회의원 선출하게 된다.

이병훈(동남 을), 이용빈(광산 갑) 의원은 특별·광역시에서의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 순으로 당선되는 방식이다. 만약, 광주광역시에 대선거구제가 도입, 8석의 의석이 배정되고 민주당이 50%의 득표율을 얻는다면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 순으로 4명이 당선된다.

반면, 주철현(여수 갑), 민형배(광산 을), 신정훈(나주·화순)의원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중대선거구제나 대선거구제가 오히려 기존의 정치적 기득권을 강화, 현재의 거대 양당체제를 더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의원은 수도권과 광역시 이외 지역은 인구 기준에 예외를 두고 면적에 가중치를 두는 방향으로 선거제를 개편해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례대표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약간씩의 입장 차이는 있지만 대개 권역별 연동형 내지 준연동형제 도입을 주장했다.

전국을 6개 권역 또는 광역자치단체 단위인 17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의석수가 적은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 가운데 일부를 우선 배분한 뒤, 남은 의석을 지지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다.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가 갖는 약점인 표의 등가성 및 비례성 왜곡을 비례대표제를 통해 메운다는 논리다. 또 지방에 가중치를 두면서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담겼다.

조오섭, 이용빈 의원은 권역별 연동형에 '석패율제'를 가미한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고 신정훈, 주철현 의원은 권역별 비례제에 인구 기준과 함께 선거구 면적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특히, 주 의원은 권역별 병립·개방형 비례대표제를 도입, 정당이 일정 기간 이상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하고 선거구 기준 면적에 바다와 섬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 눈길을 끌었다.

소병철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의 기형적 분할 상황을 소개하며 '공직선거법'상의 '하나의 시 분할 금지' 원칙 준수를 강조하며 순천시의 선거구 정상화를 강조했다.

또 민형배, 이용빈 의원은 선거제도 개편 결정을 시민공론화위원회에 맡기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선수(국회의원)가 룰을 정하면 안 된다는 논리다. 송갑석(서구 갑) 의원은 선거제도 개편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보다 국민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전원위에서 제시된 각종 방안이 국회 정개특위의 국민공론화위원회로 이어져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미래를 위한 선거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민형배 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1:1 비율인 각 150석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전원위가 마무리됐지만 백가쟁명식 선거제도 개편 주장을 토대로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전원위 논의는 참고 사항에 그칠 가능성이 크며 결국 정개특위에서의 여야 논의를 통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선거제도 개편안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서 부결

찬성 177·반대 112·무효 1…여당, 집단 부결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이었다.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이 법안에 대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 모아도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 가결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가결을 결의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도 총동원령을 내리고 의원 겸직 국무위원 3명 중 해외 출장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제외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까지 표결에 참석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국힘 '민주 전대 돈봉투 의혹' 비판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선출 당시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과 관련, "민주당의 '이정근 게이트'가 열리고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최근 여권이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 여당 지도부 인사들의 잇단 실언 등 여러 악재로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 들이 거론되는 '전대 돈 살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돈봉투 선거가 169석을 가진 원내 제1당 당내 선거에서 횡행하고 있었다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쯤 되면 민주당 전당대회는 '돈당대회', '쩐당대회'라고 표현될 정도로 부패한 걸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이어 "돈으로 매표한 행위는 반민주 부패정당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인데 민주당이라는 당명이 부끄러울 정도"라며 "10명의 현역 의원에게 돈봉투가 전달된 걸로 알려지고 있는 데도 거론되는 당사자들은 '야당탄압' 주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한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자처하고 핏대를 세워본들 국민적 의혹은 더 커져만 간다"고 직격했다.

김병민 최고위원도 "집권당 국회의원과 핵심 당직자의 통화였다는 게 믿어지나"라며 "두 사람은 송영길 대표를 만들기 위한 핵심 조력자였고 전당대회 이후 당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직에 임명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광주 군 공항 이전, 광주·전남 상생 동력돼야"

송갑석 의원 "정부 지원 필요"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송갑석(서구 갑) 의원은 13일 오후 "광주·전남지역 정치권과 광주시, 전남도 등이 군 공항 이전과 관련, 상생 발전 방안 마련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송 의원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군 공항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 논의를 선제적으로 진행, 정부의 '군 공항 이전 사업 지원위원회'에 제시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광주와 전남이 군 공항 유치 지역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제시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의 부족 재원에 대한 국비 지원 방안이 담겨있고, 정부 차원의 지원 사업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광주는 물론 전남의 유치 지역도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특별법 제정 및 통과 과정에서 기부 대 양여 부족분의 국비 지원에 대한 정부 동의는 큰 성과"라며 "이제 광주 군 공항 이전은 광주와 전남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윈-윈 전략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미진한 부분은 시행령을 통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 25년 동안 표류해왔던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물꼬가 트인 만큼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내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싼 지분 임야, 삽니다
맹지사절. 010-9582-7400

대인동 신안동 상업용지, 매매
대인동 - 156평, 매매 - 21억
신안동 - 176평, 매매 - 23억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득, 변경가
문의. 010-3605-5000